

“문화전당 콘텐츠 공개·조직 구성 서둘러야”

광주문화재단·지역 문화전문가 ‘원탁회의’ 민주·인권 아우른 광주만의 문화상품 절실 지자체 재정 고려 매칭 지원사업 차등화

오는 2015년 개관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콘텐츠 구성안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와 함께 전당을 운영할 조직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오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라는 지역문화정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라운드 테이블’(공개토론회)이 진행됐다. 지역 문화전문가들과 시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송진희 호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문화전당 운영과 이 공간을 채울 공연·전시 등 콘텐츠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조진태 광주민족문화학자회의 회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한 지 10여년 가까이 됐으며 그동안 콘텐츠 수집도 어느 정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들이 아는 정보는 거의 없다”며 “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콘텐츠 수집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 보고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 상임이사는 “문화전당을 꾸러갈 전담 조직

조각 구성이 안 돼 콘텐츠 제작과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서둘러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현 광주일보 문화선임기자는 “문화전당과 성격이 유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홍콩 서구룡지구의 경우 이미 6년 전부터 전담을 이끌 어갈 대표를 선정하고 공연 디렉터 등 거물급 스타들을 영입해 준비해 들어갔다”며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전당이 나아가갈 방향에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조직을 하루빨리 구성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화전당의 콘텐츠를 광주만의 정서와 한국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만식 광주민예총 회장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담는 것도 좋지만 광주적 정서를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기훈 상임이사는 “지역이 배제된 콘텐츠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한국 고대문화의 신화적 상상력이나 사상을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운모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은 “광주는 80년 5월이라는 훌륭한 콘텐



광주문화재단은 11일 오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문화전문가들과 시민들을 초청, ‘새 정부에 바라는 지역문화정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원탁회의를 열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츠를 갖고 있음에도 문화적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며 “민주·인권·평등 정신이 모두 녹아 있는 광주의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인철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원은 “문화에는 창작·유통·향유의 기능이 모두 포함되는데 자칫 문화전당의 경우 전시 기능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문화관련 기관간 네트워크를 잘 살려 호남지역 문화원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도 이어졌다.

김영순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은 “광주의 인적 자원을 문화전문

가로 양성하는 문화양성 스펙트럼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칭)컬처&아트 스펙트럼을 만들어 장·단기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면 타지역은 물론 외국에서도 교육을 받으러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콘텐츠와 운영방식으로 문화전당이 운영되더라도 시민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콘퍼런스 대회를 열어 문화전당 개관 때 시민들이 꾸미는 콘텐츠를 선보이는 방식도 있다”고 소개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지역문화정책 관련, 참석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와 행·재정적 뒷받침”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기훈 상임이사는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제도화를 통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전국 시·도별로 진행되고 있는 매칭 지원사업의 경우도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해야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진희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콘텐츠를 아시아는 물론 세계로 내보낼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광주를 중심으로 이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TV채널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KTX 철도경쟁체제’ 일반노선 확대 움직임

국토부, 신규·적자노선 검토

정부가 수서발(發) KTX에서 도입할 ‘제3의 경쟁체제’ 방식을 KTX 외에 일반 열차노선으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서발 KTX 이후에도 경쟁체제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 장관 취임 이후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민간 경쟁체제 대신 철도의 공익성까지 고려한 제2 철도공사 설립 또는 민간 합동방식 도입 등 제3의 대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새로운 경쟁체제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지만 이후 개통하는 또 다른 신규노선에 도입할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KTX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일반 열차까지 검토 대상이다.

서 장관은 “KTX는 흑자가 많이 나는데 일반 여객이나 화물 열차는 적자가 많다. 또 현행 공익비즈니스(PSO) 운영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예산에서 말하긴 어렵지만 KTX에만 경쟁체제를 적용할지, 다른 부분에도 적용할지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주~강릉 복선철도 등 향후 개통 예정인 일반철도 노선에서도 코레일이 아닌 새로운 철도운영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수서발 KTX를 운영할 새 철도사업자와 기존 코레일이 앞으로 개통하는 다른 노선에서 운영권을 놓고 경쟁할 경우 서비스 개선과 운임 하락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논리다.

서 장관이 지적한 PSO는 현재 코레일이 운영 중이지만 정부가 국고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노선으로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역시 경쟁체제의 도입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코레일이 운영권을 포기한 노선은 없지만 가능하다면 적자 공익노선에도 경쟁 요소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외국에서 시행 중인 최저보조금 입찰제 등의 제도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적자노선에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까지 수서발 KTX 운영사의 방식을 정하고, “예산에서 말하긴 어렵지만 KTX에만 경쟁체제를 적용할지, 다른 부분에도 적용할지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중두

죽여 주사이다

“목포~ 부산 KTX 건설 시급”

동북아경제권 시대 경제교류·균형발전 위해 꼭 필요

목포상의·부산상의 '장보고의 길 대토론회'

동북아 경제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목포~부산 간 KTX 건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포상공회의소와 부산상공회의소는 11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태평양을 열어 장보고의 길을 가자’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은 기조강연에서 “바다는 동양 3국의 과거가 아닌 미래”라고 전제하고 “장보고 대사의 정신은 동양 3국의 살 길을 개척하는 실�크로드”라며 “목포와 부산을 잇는 남해안 벨트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 열린 종합토론에서 김두구 교수(우석대 교양학부)는 ‘진정한 세계적 강국은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풍수학적 측면에서 접근해 “조선은 산을 중시한 반면 일본은 물을 중시해 훗날 양국의 미래가 크게 달라져 GNP 비율 10 : 1의 차이로 나타났다”며, 일본은 이미 19세기말 세계 해상강국이 됐다”고 역설적으로 설명했다.

김익두 교수(전북대 국문과)는 “목포와 부산이 연합으로 ‘해륙-아우라’ 문화 축제를 기획해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육지 부

화와 해양부 문화의 융합을 ‘장보고 문화’에서 찾아낸다면 육지 중심의 정체된 세계문화가 약동적으로 재할성화 되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호남 목포상의 회장은 “21세기 장보고의 길을 재현하는 열쇠는 부산~목포 간 고속철(KTX) 건설”이라며 “경제논리 외에도 교류 촉진을 통한 지역대립 해소, 국토 균형발전, 국민의 교통안전 확보 등 특별한 접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산과 목포가 상공·문화·예술·학술·종교의 꽃을 피웠던 옛 영광을 재현하고 동서화합과 국민대통합을 만들어가는 대명제를 실현



목포상공회의소와 부산상공회의소, 목포시와 부산해운대구가 11일 오후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태평양을 열어 장보고의 길을 가자’란 주제로 양 지역 공동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있다. <목포상의 제공>

하는 고속철 건설에 힘을 하나로 모으자”고 역설했다.

이전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은 “남해고속철도는 남해안 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이자 동북아경제권 시대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경제적

타당성 보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조기 완공해 영·호남 간 교류 활성화는 물론 남해안이 ‘동북아 해양관광·신산업 중심지’로서 제2의 국토 성장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61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since 1952 회갑의 해

주요행사

- 남악제례행렬
- 남악제례악연주 / 남악제례
- 한궁다례
- 구례향제줄풍류 공연
- 구례잔수농악 판굿
- 호남여성농악 판굿
- 남원농악 판굿
- 백두한라예술단 초청공연
- 전국 길거리 씨름대회
- 영호남 장기대회
- 군민체육대회
- 군민노래자랑

지리산 남악제

南岳祭

제69회 지리산 남악제
제32회 군민의 날 행사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

부대행사

- 전국 남·여 시조경창대회
- 전국 남·여 궁도대회
- 남악시예백일장 및 작품전시회
- 구례사신동우회 작품전시회
- 구례미술협회 작품전시회
- 내고장문화재 그리기대회
- 관둑회 작품전시회

체험행사

- 전통 떡만들기
- 우리차·약수 시음회
- 홍화염색 작품 전시
- 전통수공예 부채 전시
- 한지공예 전시·체험
- 화분만들기 체험

2013. 4. 19.(금)~21.(일)
 화엄사시설지구 및 공설운동장 일원

주최 : 구례군
 주관 : 구례군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전라남도
 문의 : 061-780-2727 www.gurye.go.kr